

현안과 과제

4.11 총선과 경제공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Executive Summary

□ 4.11 총선과 경제공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4.11 총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유권자들은 이번 4.11 총선에서 지지 후보 선택시 소속 정당보다는 인물 또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다수의 유권자들은 후보의 소속 정당이나 학연·지연보다 인물(47.0%)과 정책(35.0%)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젊은 유권자의 경우 인물보다는 정책을 더 중시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인물에 대한 고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약 중 투표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 분야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중 69.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정당들의 경제공약 중 유권자들의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물가 안정(37.2%)이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일자리 창출(20.6%), 경제 성장(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들의 공약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공약(15.4%)이나 경제 민주화(6.1%) 등의 이슈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

최근 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 중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공약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포퓰리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복지공약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응답은 각각 53.0%와 47.0%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다만 유권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공약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이 선거 후에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91.0%를 차지했다. 또한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개혁 등을 통해 복지공약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73.5%를 차지했다.

■ 복지공약과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

복지공약과 세금 부담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유권자의 의견이 다소 많았고,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유권자는 54.1%,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는 전체 응답자 중 45.9%로 조사되었다. 한편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유권자 중,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55.6%이고 의향이 없는 유권자는 44.4%이며,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유권자 중,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34.7%이고 의향이 없는 유권자는

65.3%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연 12~36만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36만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44.1%이고, 연 1만원 미만은 31.5%, 연 60만원 미만은 14.8%, 연 60만원 이상은 9.6%로 조사되었다.

■ 남북 경협에 대한 인식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의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 64.9%로 필요없다는 응답자 35.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민들이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통일 기반의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협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통일기반 조성을 택한 응답자가 전체 48.4%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활성화(17.8%), 성장동력 창출(14.0%) 지정학적 위협 감소(9.9%), 지역경제 활성화(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수의 국민들은 현 상황에서 남북 경협의 재개 및 확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경협의 확대가 향후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시사점

첫째, 무엇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복지나 경제 민주화보다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공약 정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둔화되고는 있으나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상황으로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일자리 창출 대책도 단순한 목표 숫자 제시보다는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단순히 표를 의식해서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확대하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복지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론 조사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현실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복지공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 부담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 만큼 복지공약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한 남북 경협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조사 개요

○ 개요

- 조사 기간 : 2012년 3월 26일 ~ 3월 30일 (5일간)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07개 샘플을 수집
- 표본 오차 :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임
- 조사 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	학생	주부	농림	무직
명	508	499	213	265	255	274	436	106	166	64	163	12	58
%	50.4	49.6	21.2	26.3	25.3	27.2	43.4	10.5	16.5	6.4	16.2	1.2	5.8

구분	소득수준별						학력별		
	100만 이내	200만 이내	300만 이내	400만 이내	500만 이내	500 이상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명	70	174	247	177	161	129	319	638	48
%	7.3	18.2	25.8	18.5	16.8	13.5	31.7	63.5	4.8

구분	지역별								지역규모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명	210	276	101	107	164	107	31	11	475	330	201
%	20.9	27.4	10.0	10.6	16.3	10.6	3.1	1.1	47.2	32.8	20.0

2. 조사 결과

1) 총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 선택시 소속 정당보다는 인물 또는 정책을 고려

- **(전체)**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이나 학연·지연보다 인물이나 정책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지 후보 선택시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인물·능력(47.0%)’이 가장 높고 ‘정책·공약(35.0%)’이 뒤를 이음
 - 반면 소속 정당(15.8%)이나 학연·지연(2.2%) 등은 투표시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젊은 유권자의 경우 인물보다는 정책·공약을 더 중시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인물에 대한 고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경우 선거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책·공약(50.5%)이 인물·능력(3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인물·능력이 정책·공약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세대가 높아질수록 정책·공약보다는 인물·능력에 대한 고려가 중요시
- **(지역별)** 지역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을 우선시하나, 지역에서는 인물보다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시
 - 호남/제주 지역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소속 정당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서울/경기 지역은 인물에 대한 고려가 높았음

< 지지후보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

구분	전체 (%)	연령별 (%)				지역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서울 경기/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인물·능력	47.0	32.5	43.2	53.5	55.8	20.0	12.2	7.6	14.0
정책·공약	35.0	50.5	39.4	27.6	25.5	41.2	54.4	50.8	52.0
소속 정당	15.8	12.7	15.9	16.1	17.9	36.7	31.5	39.0	31.0
개연고	2.2	4.2	1.5	2.8	0.7	2.1	1.9	2.5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선거 공약 중 유권자들의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분야임

- **(전체)** 선거 공약 중 투표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 분야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중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정치·외교 분야는 18.9%에 불과해 유권자들 총선에서 후보 선택시 정치나 외교 분야에 대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세대를 막론하고 경제 분야가 가장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고려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반면 20대~30대의 젊은 유권자층에서는 후보 선택시 사회 및 문화 분야에 대한 고려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중요시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 분야가 가장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 유권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외교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사회 및 문화 분야에 대한 고려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 >

구분	전체 (%)	연령별(%)				지역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서울 경기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경제 분야	69.8	61.3	67.4	77.4	71.6	69.3	71.4	69.2	68.0
정치·외교 분야	18.9	21.7	17.4	13.5	23.2	18.9	19.7	15.4	21.0
사회·문화 분야	11.3	17.0	15.2	9.1	5.2	11.7	8.9	15.4	1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당들의 경제공약 중 유권자들의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물가 안정임

- **(전체)** 경제공약 중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이슈로 물가 안정(37.2%)이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일자리 창출(20.6%), 복지 정책(15.4%), 경제 성장(14.7%)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정당들의 공약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정책(15.4%)이나 경제 민주화(6.1%)등의 이슈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연령에 관계없이 물가 안정이 유권자들의 선거 공약 중에 가장 관심이 높은 이슈로 나타났고, 20대와 50대에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30대에서는 복지 분야가 관심이 높은 이슈로 나타남
 - 이는 전 세대의 유권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 문제가 복지나 경제 민주화보다도 바로 물가 안정에 관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20대 고졸 및 대졸 청년들과 퇴직자의 비중이 높은 50대의 유권자들에게 일자리 문제도 다른 이슈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지역별로도 물가 안정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남/제주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서울 지역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경제공약 중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 >

구분	전체 (%)	연령별(%)				지역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서울 경기/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물가안정	37.2	37.7	36.7	38.0	36.5	39.5	39.9	30.5	26.7
일자리 창출	20.6	25.0	12.5	18.0	27.0	18.3	21.4	26.3	23.8
복지정책	15.4	18.9	24.6	12.2	6.9	13.8	13.7	22.0	20.8
경제 성장	14.7	10.8	11.4	18.4	17.5	14.8	15.5	10.2	16.8
경제 민주화	6.1	3.8	7.2	5.9	6.9	4.9	7.7	5.9	7.9
부동산 정책	6.0	3.8	7.6	7.5	4.7	8.8	1.8	5.1	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

○ 최근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복지공약의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

- 포퓰리즘(Populism)이란 일반적으로 ‘대중영합주의’로 불리우며,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전체)** 최근 선거에서 각 당의 공약 중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공약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남
 - “보육, 등록금, 의료 등을 무상 혹은 대폭 지원하는 복지공약 확대”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53.0%와 47.0%로 비슷하게 나타남
- **(연령별)** 유권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공약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대 유권자의 경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8.4%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31.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70.0%로 바람직하다는 의견 30.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 호남과 제주 지역의 경우 복지공약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유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양측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공약 확대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	연령별(%)				지역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서울 경기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바람직하다	53.0	68.4	65.3	52.6	30.0	50.8	50.4	73.5	47.0
바람직하지 않다	47.0	31.6	34.7	47.4	70.0	49.2	49.6	26.5	5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유권자들은 선거 이후에 복지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인식

- **(전체)** “총선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이 선거 후에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91.0%를 차지했음
 - “후보가 노력하겠지만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9.6%, “선거철 선심성 공약이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31.4%로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
 - 반면 “후보의 약속이므로 상당 부분 지켜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9.0%에 불과하여 복지공약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연령을 막론하고 복지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30대 유권자의 경우 12.5%가 지켜질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공약의 현실화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복지공약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지역에 관계없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 지역의 유권자 중 12.9%가 복지공약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복지공약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	연령별(%)				지역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서울 경기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91.0	92.5	87.5	91.0	93.1	91.9	88.9	94.9	87.1
지켜질 것이다	9.0	7.5	12.5	9.0	6.9	8.1	11.1	5.1	1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유권자들은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음

- (전체)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개혁 등을 통해 복지공약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73.5%를 차지
 - 반면 가능하다는 의견은 26.5%에 불과하여 여야가 제시하는 복지공약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대다수는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예산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20대의 경우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20대 유권자의 67.5%가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예산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32.5%는 가능할 것으로 인식
 - 반면 50대 이상의 유권자는 80.8%가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예산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19.2%만이 가능하다고 인식
- (지역별) 지역별로 서울 및 경기·강원 지역에서 재정 개혁들을 통해 예산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유권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호남 제주 지역의 비중이 가장 낮았음
- 복지공약의 현실화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연령이나 정당 지지에 관계없이 낮게 나타나 국민들은 복지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공약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	연령별(%)				지역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제주	충청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예산 마련이 불가능하다	73.5	67.5	69.7	75.0	80.8	75.7	72.9	67.2	72.0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	26.5	32.5	30.3	25.0	19.2	24.3	27.1	32.8	28.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복지공약과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

○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유권자가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보다 다소 많음

-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유권자는 54.1%,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는 45.9%임
- 한편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유권자 중,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55.6%이고 의향이 없는 유권자는 44.4%임
 -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유권자 중,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34.7%이고 의향이 없는 유권자는 65.3%임

<복지공약 확대와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

구 분		비중(%)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55.6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	44.4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34.7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	65.3

- (세금 부담 범위)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연 12~36만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연 12~36만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44.1%이고, 연 12만원 미만은 31.5%, 연 60만원 미만은 14.8%, 연 60만원 이상은 9.6%임
 -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유권자 중에서는, 연 12만원 미만이 49.5%, 연 36만원 미만이 44.4%로 대다수를 차지

<소득별 복지공약 확대에 대한 인식>

소득 수준 부담 범위	전체 (%)	소득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월소득 400만원 미만	월소득 400만원 이상
연 12만원 미만	31.5	49.5	31.2	19.3
연 36만원 미만	44.1	44.4	42.7	45.7
연 60만원 미만	14.8	2.0	20.1	16.4
연 60만원 이상	9.6	4.0	6.0	18.6
합계	100.0	100.0	100.0	100.0

4) 남북 경협에 대한 인식

○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전체) 남북 경협의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 64.9%로 필요
없다는 응답자 35.1%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연령층에 관계없이 남북 경협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40대 유권자층에서 남북 경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다른 연
령층에 비해서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 지역별로도 남북 경협 확대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호
남과 제주 지역 유권자들의 남북 경협 확대에 대한 찬성하는 비중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남북 경협 확대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	연령별(%)				지역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서울 경기/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경협 확대 필요하다	64.9	60.0	67.0	70.6	61.3	62.9	61.4	82.6	65.0
경협 확대 필요없다	35.1	40.0	33.0	29.4	38.7	37.1	38.6	17.4	3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남북 경협의 기대효과) 국민들이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
하는 효과는 통일 기반의 조성임
- 남북 경협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통일기반 조성을 택한 응답자가 전체
48.4%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활성화(17.8%), 성장동력 창출(14.0%) 지정
학적 위험 감소(9.9%), 지역경제 활성화(9.9%)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북 경협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통일기반 조성	중소기업 활성화	성장동력 창출	지정학적 위험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합계
비중 (%)	48.4	17.8	14.0	9.9	9.9	100.0

3. 시사점

-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공약 중 복지나 경제 민주화보다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공약 정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둔화되고는 있으나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상황으로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한편 일자리 창출 대책도 단순한 목표 숫자 제시보다는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표를 의식해서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확대하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복지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현실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복지공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세금 부담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 만큼 복지공약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실현 가능한 자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남북 경협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